Vol. 12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2. 3. 28.

▮ 정책동향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 한-터키 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
-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농식품 무역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1년도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 결과(2)
- **언론 동향** ❙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와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2021 한국의 사회지표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3.22.)

❑ 개요

○ [2050 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022.3.2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2년 3월 22일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

- (의의)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

- (주요 내용)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0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 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022년~, 2.4조 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022년~)

❑ 주요 내용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20년,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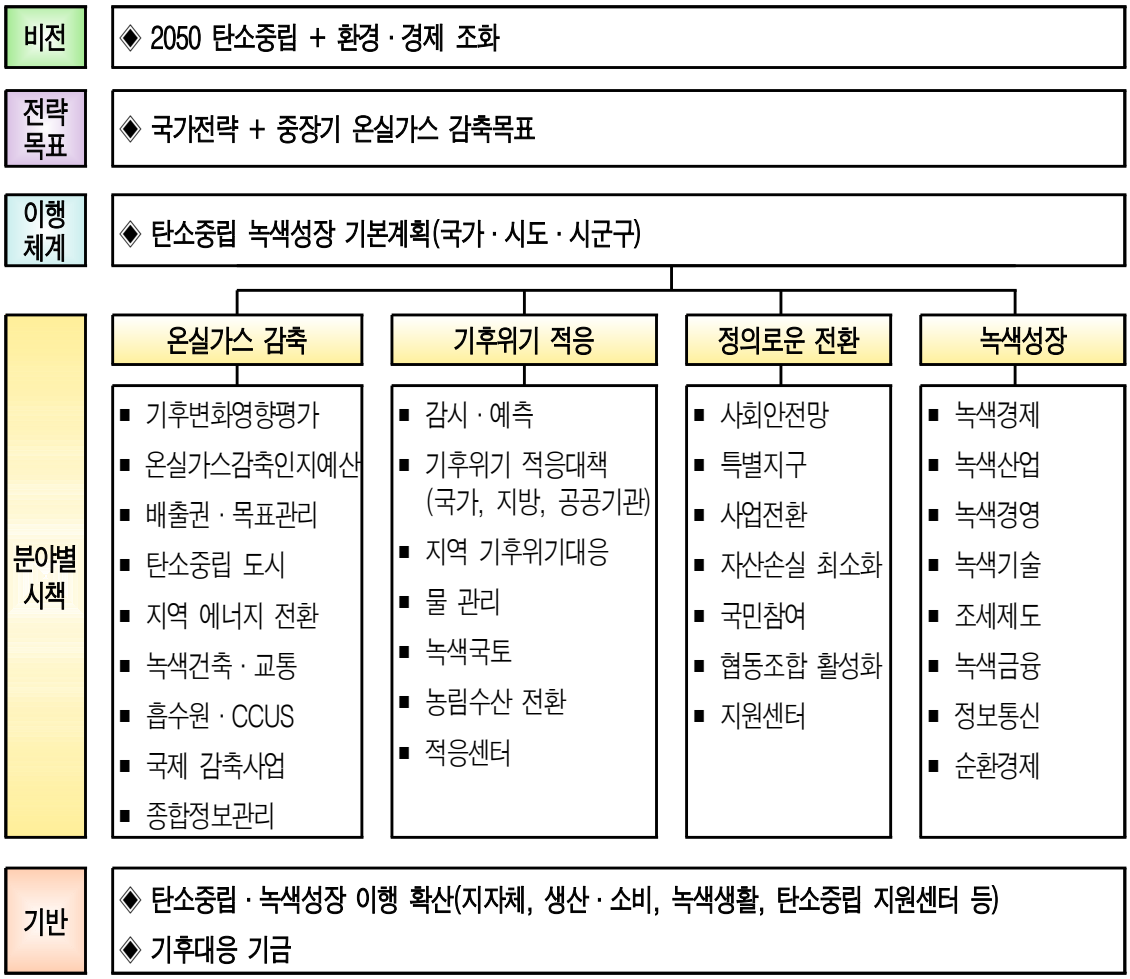
정책동향

- 이러한 NDC 상향안을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

-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

-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 아울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2. 온실가스 감축

○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

-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2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2022.9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2023.9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

-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

정책동향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

-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

-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

-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

-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시책도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

-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도 신설하여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 2022년 총 2.4조 원 규모로 편성, ① 온실가스 감축, ②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 공정한 전환, ④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

-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도 설립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20.7월 발족, 現 221개 지자체 참여)

-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 중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혜택

◈ 총괄 동향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자료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3.22.)

❑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2022.3.22.]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3월 22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제3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

- (주요 정책 방향)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아이·부모에 대한 투자 강화, △맞춤형 주거·일자리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전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교원·주택수급관리, 지역소멸대응기금 조성 등 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요 내용

1.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 2022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 예산은 전년 대비 6.2조 원이 증가한 총 78.9조 원

- (추진전략)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39.6조 원, 50.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24.4조 원, 30.8%) 두 개 분야에 81.0%(64.0조 원)의 예산을 투입

○ [영유아·아동] 2022년 출생아 대상 영아수당(월 30만 원)·첫만남이용권(바우처 2백만 원) 도입, 아동수당 확대(만 7세 → 만 8세 미만),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 [아동 양육부모]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만 원 → 100)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등

정책동향

▌2022년 정책대상별 주요 과제▐

현금성 지원	대상	서비스 지원

• 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Ⅱ) 도입
  ‧영아수당: 2022년 월 30만 원, 2025년 월 50만 원
  ‧첫 만남 꾸러미(Ⅱ): 아동 출생 시 200만 원 바우처
•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2021: 만 7세 → 2022: 만 8세 미만)
	영유아 · 아동	•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550개소 확대
		•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2021: 44.3만 명 → 2022: 53)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32개소 → 376)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인상(초 28.6만 원 → 33.1, 중 37.6만 원 → 46.6, 고 44.8만 원 → 55.4)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2022년: 신규 7만 명)
  ‧청년내일저축계좌(2021: 1.8만 명 → 2022: 10.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14만 명, 월 80만 원/12개월)
	청소년 · 청년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13.3만 호(임대주택 5.3만 호, 전 · 월세 금융지원 8만 가구)
		• HPV 백신접종 지원 확대(만 12세 여성 → 만 12~17세 여성 및 18~26세 저소득 여성 / 남성 청소년 대상 확대 방안도 지속 검토)
		• 디지털 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 확대(2021: 2.4만 명 → 2022: 2.9)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만 11~18세 →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 새일여성 인턴쉽 지원(7,777명, 월 80만 원/3개월)	여성	• 임산부 · 영아 건강관리 시범기관 확대(29개소 → 50) • 경력단절 예방 위한 새일센터 운영(75개소)

• 첫 만남 꾸러미(Ⅰ) 확대(임신 · 아동 출생 시, 2022년~)
  ‧임신 · 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만 원 → 100)
• 육아휴직 지원 신설 · 확대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 소득상한 인상(2021: 50%, 월 120만 원 → 2022: 80%, 150만 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 30만 원 → 월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022~)
	아동 양육 부모	•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공급 확대(4천 호 → 5)
		• 한부모 임대주택 공급 확대(23호 증, 총 245호)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일하는 한부모의 근로 · 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하위 70%, 628만 명) 지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2022: 60백 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2022: 30백 명)	중장년 · 고령자	• 노인 일자리 확대(2021: 82만 개 → 2022: 84.5) • 고령자 복지주택(1천 호), 주택개조 지원(1.9만 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50만 명)
•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2022.7월) • 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2022.7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40만 명 → 50)	전 국민	•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14개 시 · 도 → 17)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2022.1월) • 마트 배송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2022.7월)

○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4만 명, 월 80만 원)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7만 명)·저축계좌(10.4만 명) 지원, 주거지원 13.3만 호(임대주택 5.3만 호, 금융지원 8만 가구)

○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6천 명) 신설 및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3백 명 → 30), 노인일자리 확대(82만 개 → 84.5), 노인맞춤돌봄서비스(50만 명) 제공 등

○ [전 국민]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시·군·구),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40만 명 → 5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총 6,718개**로 구성, **총 사업비**는(순지방비) **8.45조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조 원(13.2%) 증가**※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 (2021년) 7.5조 원 → (2022년) 8.45조 원(증 1.0조 원, 13.2%)

○ **[육아·돌봄 부담 경감 사업] 대전, 광주, 전북** 등 10개 시·도 **1,122억 원**

지역	사업 내용	지역	사업 내용
부산	어린이집 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20억 원)	충남	가족센터 건립 및 지원(40억 원), 아이키움센터 운영(4억 원)
광주	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25억 원)	전북	다둥이 사랑 지원금(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7억 원)
대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818억 원)	전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19억 원)
울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13억 원)	경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44억 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 중
강원	임산부 직원 편의용품 지원(10억 원)	경남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14억 원)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 경기, 경남 등 6개 시·도 **47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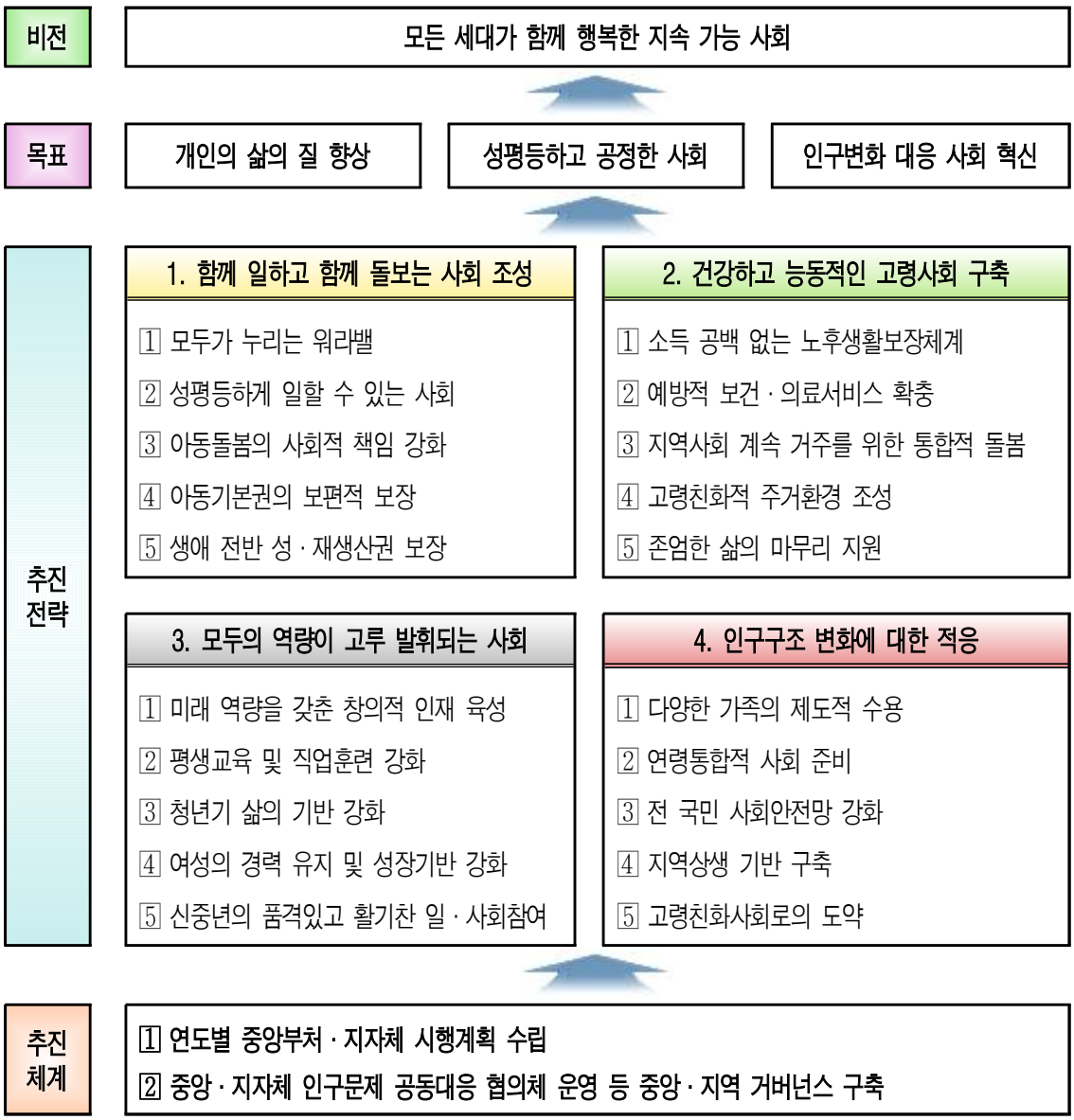
지역	사업 내용	지역	사업 내용
부산	청년부부 월세자금 지원(2억 원),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2억 원)	전북	청년 주거비 지원(10억 원)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10억 원)	전남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2억 원)
경기	출산·다자녀가구 전세이자 지원(11억 원), 청년 월세·대출이자 지원(8억 원)	경남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2억 원)

○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전남, 경기, 경남 등 8개 시·도 **547억 원**

지역	사업 내용	지역	사업 내용
대전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10억 원)	충남	충남 청년 공모사업(10억 원)
경기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37억 원),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17억 원)	전남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 SW 교육※(152억 원),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운영(179억 원) ※ 인공지능교실 구축
강원	신중년 사회공헌 및 재취업 지원(8억 원)	경북	바이오백신 관련 일자리 창출(16억 원), 교육경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95억 원)
충북	교육경비 지원(11억 원)	경남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12억 원)

정책동향

▌참고: 제4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3.25.)

○ [산업통상자원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2022.3.25.] 2022년 3월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따라 CPTPP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

정책동향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 명(전 세계의 6.6%),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20년 기준)

- **(주요 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

※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경제적타당성 검토 결과 및 보완대책 방향 주요 내용〉

◈ **(거시경제)** 시장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 · 투자 · 고용 증가로 실질 GDP 0.33~0.35%, 소비자후생 30억 달러 증가 전망(KIEP)

– **(제조업)** 멕시코 · 베트남 등에 대한 수출 확대 및 국내생산 증가 예상※

※ 15년간 연평균 6~9억 달러 규모 순수출 증가, 1.18~1.82조 원 규모 생산증가(산업연구원; KIET)

– **(농업)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전망**※

※ 15년간 연평균 853억 원~4,400억 원 생산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 **(수산업)**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 · 갑각류 등 수입 증가 전망※

※ 15년간 연평균 69억 원~724억 원 생산감소(부경대학교)

◈ **(보완대책)** CPTPP 가입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

※ 협상 완료 이후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되나, CPTPP의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

– **(기본원칙)** ① CPTPP 가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상, ② 협상타결 前에도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 ③ CPTPP 활용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공세적 발굴

– **(농 · 수산업)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

- **(피해 직접지원)** 피해보전 직불 연장, 폐업지원 재도입, 지원조건 개선 등 적극 검토
- **(경쟁력 제고)** 피해품목 생산 · 유통 인프라 확충, R&D 확대,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
- **(국내수요기반 확충)** 먹거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원산지 · 이력제 등 수입제도 개선 등
- **(구조전환)**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청년 · 후계농 및 고령농 지원 강화 등

– **(제조업)** 소부장 · 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 · 중소 상생협력, 판로확충 등과 함께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

- **(소부장 · 신산업)** CPTPP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 추진 검토, 對日 피해업종 및 신산업 핵심분야※ R&D 지원 강화 등

  ※ 기계 · 장비, 자동차 · 부품, 친환경차 · 미래차, 화학소재, 탄소섬유 · 아라미드 등
- **(대 · 중소 상생협력)** 대중소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 확대 검토,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검토 등
- **(수요기반 · 판로확충)** 기계장비부품 등 분야 국산제품 보급 지원, 수출지원 확대
- **(피해지원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CPTPP 정보제공 · 교육 확대 등

  ※ (융자) 연 2% 고정금리, (심층 컨설팅) 비용 80% 지원, (근로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한-터키 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3.23.)

❍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2022.3.2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9년 차**를 맞이하여 양국 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5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를 **2022년 3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

※ 2013.5월 한-터키 FTA 발효 후, 총 4차례(2014.9월, 2016.12월, 2017.12월, 2019.12월) 개최

- **(주요 내용)**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변화, 경제적 영향 등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2년 개최한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

※ 위생·검역(SPS) 작업반(2022.1월), 관세위원회(2022.3월)

- **(한국 측)**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리 업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사항※※인 **원산지 반복 검증** 등에 대해서도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 **(터키 측)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 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요청**

※ 터키의 對한국 반덤핑조치는 총 13건이며, 현재 3건이 조사 중

※※ 원산지 반복 검증으로 인한 서류 중복 작성 및 수출 절차 지연 등 업계 부담 과중

▌한·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	3,773	2,661	3,753	5,071	4,552	5,658	6,665
	증가율	△7.7	△29.5	41.1	35.1	△10.2	24.3	17.8
수입	금액	362	434	516	805	672	692	655
	증가율	28.5	20.0	18.8	55.8	△16.4	2.9	△5.3
무역 규모		4,135	3,095	4,269	5,876	5,224	6,350	7,320
증가율		△5.4	△25.2	37.9	37.6	△11.1	21.6	15.3
무역수지		3,411	2,227	3,237	4,266	3,880	4,966	6,010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액	6,249	5,385	6,156	5,980	5,298	5,545	7,025
	증가율	△6.2	△13.8	14.3	△2.8	△11.4	4.66	26.7
수입	금액	789	742	782	1,189	1,189	1,317	1,235
	증가율	20.5	△6.0	5.3	52.1	0.0	10.77	△6.3
무역 규모		7,038	6,127	6,938	7,169	6,487	6,862	8,260
증가율		△3.9	△12.9	13.2	3.3	△9.5	5.78	20.4
무역수지		5,460	4,643	5,374	4,791	4,109	4,228	5,790

정책동향

▌2021년 한·터키 품목별 교역 현황(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MTI 4단위▐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합성수지(2140)	1,267	61.9	의약품(2262)	353	△43.5
2	석유화학합성원료(2130)	525	74.1	자동차부품(7420)	97	8.3
3	자동차부품(7420)	396	24.8	직물제의류(4412)	60	11.6
4	의약품(2262)	367	△38.7	편직제의류(4411)	59	28.6
5	기타석유화학제품(2190)	283	60.6	기타석유제품(1339)	55	203.3
6	열연강판(6132)	274	△11.4	기타정밀화학원료(2289)	48	97.9
7	원동기(7111)	246	37.4	니켈괴및스크랩(6231)	32	68,997.2
8	아연도강판(6134)	240	56.7	항공기부품(7472)	29	13.0
9	승용차(7411)	238	15.4	의료용기기부품(7332)	25	26.5
10	중후판(6131)	173	125.3	음료(0159)	22	△43.4
	품목 합계	4,009		품목 합계	780	
	전체 합계	7,025		전체 합계	1,235	

◈ 농업·농촌 동향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3.21.)

○ [농식품부,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 발표, 2022.3.21.]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품목별 매입량**…전년과 같은 콩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 △**매입가격**…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 (1등)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2022년 3월 21일부터 시작, 실제 매입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실시

▌매입가격(원/kg)(단위: 원/kg)▐

구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700	4,470	4,240	3,790	3,110
	중립종	4,580	4,360	4,130	3,700	3,030
	소립종	4,030	3,770	3,570	3,200	2,620
콩나물콩	중립종	–	4,180	–	–	–
	소립종	4,670	4,360	–	–	–
팥		–	5,190	4,960	–	3,330
녹두		–	7,000	6,680	–	4,500

※ 자품종구분 매입가격(대립 특등급 기준): aT kamis 12월~익년 1월 상품 평균 가격의 87.6% 수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3.24.)

○ [농식품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2022.3.24.]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2022.3.23.~4.14.)하고, 이를 통해 2022년 4월 25일 주간에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 개소당 총 18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 농촌 돌봄마을은 농촌 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과 사회적 농장 및 배후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며 마을의 시설을 새로 단장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 △1년 차··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비로 국비 6억 원이 지원, △2~3년 차··기초공사 비용 및 의료·복지 시설, 농장, 야외활동·임시 거주 주택 등의 설치에 국비 85억 원을 지원

◈ 각 도별 동향

▌각 도별 주요 정책 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경기	• 경기도, 2022년 첫 시행 '임업직불제' 준비 만전(2022.3.21.) – 경기도는 2022년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 이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22년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 ※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 다만, 2022년 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 –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 –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교육은 2022년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 • 경기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2022.3.24.)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경기도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의 일환인 '탄소포인트제※' 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신규 가입을 7만 세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공직자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 · 단체 등과 연계해 가입을 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환경 분야 교육 · 행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 ※ 환경부가 2009년 도입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 가입자가 지급 받은 포인트는 현금이나 종량제봉투 등 현물로 교환 가능(개인당 1년 최대 10만 원),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와 환전 수수료 최대 7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경기도에서는 25만 7,633세대와 1,207단지에서 참여해 이산화탄소를 5만 199tCO_2 감축했고, 10만 4,608세대가 10억 2,033만 원의 인센티브 수령 – 탄소포인트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시 · 군비(50대 50)만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도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2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원(도비 50 시 · 군비 50)을 별도 편성, 이를 통해 신규 가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상향(상향규모는 미정)할 방침
강원	•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 접수, 583억 원 지원(2022.3.23.) – 강원도는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 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농가별 70만 원씩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 – 이를 위해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별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 방문 접수 외에도 누구든 스마트폰에서 '나야나'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 –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 및 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임)어에 종사한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확정하여 8월부터 농가별로 연 70만 원의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 ※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강원도,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총력(2022.3.21.) – 강원도는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2022.3.18.)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강원도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키 위해 총력 대응 – 이에 따라 선인의 7개 지역공약과 더불어 강원지역 유세 시 제시한 추가공약을 세부과제화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새 정부 국정과제화 대책단(가칭)" 을 운영, 추진단은 ▲인수위 · 중앙부처 가교역할을 위한 기동대응팀(서울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반(과제 담당 실국),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 협조를 위한 외부 협력단(강원연구원, TP 등)으로 구성하고, 추후 내부 보고회 등을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논리를 담아 최종 실행계획을 수립
충북	• 충북도, 인력 30만 명 투입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2022.3.21.) –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 – ▲농번기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 수요 시기, 작업난이도 등 인력수요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인력지원을 추진,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농업 인력수급 상황실 운영으로 농작업 진행 상황, 인력수급 실태, 인건비 동향 등의 모니터링 진행, ▲농촌인력중개센터(6만 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3천 명), 생산적 일손봉사(20만 명), 농촌일손돕기(1만 명), 농작업 대행서비스(8천 명) 등 30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 ▲2022년 충북도의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447농가, 1,464명을 배정받아 해외 지자체와 협약(MOU) 체결, 격리시설 마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입국 절차 진행 중 • 충북도, 정책자문단 농어업분과위원회 개최(2022.3.21.) – 충청북도는 2022년 3월 18일, 제6기 도정정책자문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대응 방안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 현실 극복 대책 등 2022년도 농정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도정 정책자문단은 11개 분과별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 240여 명으로 구성되어 도정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 결정, 현안사업 대처 · 해결 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 – 아울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성공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함께 실시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기반 마련 의지도 다짐 • 충북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2022.3.22.) – 충청북도는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착륙을 위해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지난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 참여하는 한편, 2021년 7월부터 수립 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 마련 등 지자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 이를 위해 탄소중립의 실행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정책 수단인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탄소중립책임이행관을 2022년 상반기 내 완료하고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구성 · 지정할 계획 – 특히, 전국에서 4번째로 시범 도입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2023년 당초 예산의 시범 도입을 목표로 2022년 3월 2일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해 예산 수립과 사용에 영향을 미쳐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 · 집행 – 이 외에도 비법정 탄소중립 사업으로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 추진, ▲초록밥상 운영,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탄소중립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 포럼 운영, ▲영화관 다회용컵 사용 업무협약,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구성 · 운영, ▲2050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 · 운영 등을 함께 추진 중
충남	• 충남도, 3농정책위원회 열고 농어업 새로운 활로 모색 및 역할 정립(2022.3.23.) – 충청남도는 2022년 3월 23일, 2022년 상반기 3농정책위원회를 개최, 3농 정책 추진 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고, 2021년 발표한 '2030 충남 농정 미래비전'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농어촌과 농어민의 새로운 활로와 농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 –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민선7기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 농림어업 전국 상위 안착※, ▲농어민수당의 개별 지급 전환, ▲지자체 최초 '내포문화 숲 길' 국가 숲길 지정, ▲ '어촌뉴딜 300' 33개 어촌 · 어항 지정 등 농어촌 현장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 ※ 충남의 농림어업 GRDP는 2020년 12월 기준 4조 2,709억 원, 농가소득은 4,564만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며, 쌀 생산량은 67만 8,000톤, 벼 재배면적은 13만 헥타르로 전국 2위를 차지 ※ (축산 분야) 한우 45만 마리(전국 3위), 젖소 7만 마리(전국 2위), 돼지 237만 마리(전국 1위) 등 축산업의 중추 거점도시, (해양 수산 분야) 수산식품 수출액 1억 5,000만 달러 달성 및 5,378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해양건도로서 약진 – 2030 충남 농정 미래비전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농가소득 향상, 농업분야 탄소중립, 농촌인력, 농업생산시설 디지털 전환 등 5대 분야 15개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에 속도 –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 사회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재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3대 위기 상황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핵심 가치와 공익적 기능이 새롭게 조명될 것"이라며 "청년 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여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 • 충남도, '충남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2022.3.21.)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충청남도는 농공단지협의회와 입주기업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2022년 3월 21일, '충남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 도내 농공단지 현황과 도의 지원사업 및 정책을 설명하고 2022년 추진할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공유 – 도내에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14개 시도 농공단지 476개소 중 19.5%에 달하는 93개소가 조성돼 있어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으며, 농공단지가 도내 전체 산업단지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입주기업 수 39.6%(1,106개사), ▲고용 인원 24.1%(3만 732명), ▲생산액 10.9%(9조 4,880억 원), ▲수출액 4%(166억 8,100만 달러) – 지역별로 보면 공주지역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9개소, 홍성 · 예산 · 보령 8개소, 당진 · 청양 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이 1개소로 가장 적어 – 도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행해 온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에는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수처리시설 교체, ▲사무실 · 회의실 새단장 등 33개 단지 51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68억 5,400만 원을 투입하기로 – 아울러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과 문제점, 건의 사항을 검토해 개선 ·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
전북	• 전북도, 관계인구 확대 프로젝트 시동(2022.3.21.) – 전라북도는 지역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코자 서울 50플러스 재단※과 협력, 서울시 50+※※ 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 ※ 서울 50+재단(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시 50+ 세대 종합지원(교육, 문화 일자리 등 체계적 지원) ※※ 50+세대: 만 45-65세 서울시 거주자 ※※※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 세대를 전문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북 소재 기업(기관)에 배치하여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역 체류를 통해 활동 수행과 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2021년 서울시 50+재단과 지속적인 협의(5회)를 통해 (서울시 50+재단)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세대 등의 일자리 기회 제공, (전북도) 지역소멸위기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구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생협력의 모델로 2022년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 ※ (서울시 50+ 재단)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중순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교육과 활동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 · 파견(5월)하고 (도 · 시군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무주 · 임실 · 부안 활동처에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현장 활동 인턴십과 지역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 – 전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도농 간 상생협력사업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 모델로 정착시켜 서울 50+재단과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층, 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해 관계인구 확대 농촌 활력 방안을 구상해 나갈 계획 • 전북도, 축산환경 개선 총력(2022.3.22.) – 전라북도는 도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발맞춰 축산악취개선사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에 3개 분야 17개 사업 302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 ※ ① 축산환경개선 분야 7개 사업 206억 원, ② 가축분뇨 적정처리분야 5개 사업 42억 원, ③ 분뇨처리 공공성 강화 5개 사업 54억 원 등 총 17개 사업 1,828개소 302억 원 –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축산환경개선 분야는 악취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저감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악취저감제 지원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2022년도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특히, 농식품부 공모 축산악취개선사업은 2021년 5개 시·군 97억 원에 이어, 2022년도에는 8개 시·군 18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지역 단위 축산악취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
전남	• 전남도,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대상 396개 공동체에 사업비 21억 원 지원(2022.3.20.) – 전라남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업인 '2022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2022년 396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추진사업은 2개 유형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기빛깔 사업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사업 개발로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돕는 사업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형, 아파트형, 행복마을리빙랩 사업으로 구분, 공동육아 돌봄, 갈등 해결 등에 공동체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 – (공기빛깔 사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며,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구분, 마을 자원조사, 마을 계획수립, 마을 테마 사업에 공동체별 최대 2천만 원을 보조 – 202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시·군센터는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25일까지 회계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진행, 회계교육과 사업 실행계획 승인을 마친 공동체는 보조금을 교부 받아 2022년 4월 초부터 사업에 착수 • 전남도, 전국 첫 빈집 성과감사로 활용방안 제시(2022.3.22.) – 전라남도는 최근 농어촌 지역 골칫거리인 빈집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급별·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정비 등 활용방안을 제시 – 방치된 빈집이 주거 경관과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빈집은 총 1만 9천 727호였고, 이 중 철거형은 1만 1천 3호(55.8%), 활용형은 8천 724호(44.2%) ※ (빈집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등급을 분류한 결과)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2천 110호(10.7%), ▲주택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5천 112호(25.9%),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5천 925호(30%), ▲매우 불량한 4등급은 6천 478호(32.9%), 기타 102호(0.5%)로 집계, 3~4등급이 전체의 63%를 차지해 도내 빈집의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 빈집 소유자가 철거와 활용에 동의한 경우는 2천 835호로 전체의 14.4%에 불과해 소유자의 철거·활용 부동의가 큰 문제점으로 파악 ※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구조 빈집이 9천 32호나 방치돼 있어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 – 22개 시군의 빈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빈집정비계획 미수립 및 빈집조례 정비 노력 부족, ▲형식적인 빈집실태조사 실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노력 미흡, ▲빈집 활용방안 모색 소홀, ▲슬레이트 구조 빈집 정비에 소극적 대처, ▲빈집정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전남도는 감사 결과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
경북	• 경북도, 농촌교육농장 안전의식 강화 교육 실시(2022.3.21.)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 3월 21일, 농촌교육농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 경영주 30명을 대상으로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농촌체험관광경영체들의 안전관리 의식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진행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농촌교육농장 농장주들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응급상황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등을 전문 강사에게 교육받으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특히,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들의 품질인증 및 유지를 위해 2년 마다 응급처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장주들이 실제 체험활동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대처 – 농촌교육농장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현재 경북도내에 90여 개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마음방역 농촌관광 경북愛5GO' 와 연계해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방침 • 경북도, '경북도 탄소중립 추진단' 회의 개최(2022.3.23.) – 경상북도는 2022년 3월 23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대응과 도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경북도 탄소중립 추진단' 회의를 개최, 도청 내 24개 관련 부서장이 모인 가운데 ▲국·내외 탄소중립 현안 사항 및 도가 수립 중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 추진상황 발표, ▲2050 경상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단계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한 실무부서의 추진계획, 대응 방안,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설명, ▲부서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 도는 2021년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발표에 따라 탄소중립추진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특히, 추진단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현안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탄소중립사업을 확대·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부문별로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발굴과 세부 실천과제 수립 – 한편, 경북도 탄소중립추진단은 2021년 8월 31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분야로 구성·운영 중,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경우 전환, 산업, 수송 등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맞춘 9개 부문으로 나눠 운영
경남	• 경남도, 논 타작물 재배 농가에 정부, 지자체 각종 장려금 지원(2022.3.22.) – 경상남도는 쌀 적정 생산대책의 하나로 2022년 논에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하여 각종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 지난해(21년산) 쌀생산량이 27만 톤 정도 초과 생산되어 과잉 공급된 20만 톤을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7만 톤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실시 – 이에 따라 2221년에도 평년 수준으로 쌀이 생산될 경우 5% 정도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초부터 강도 높은 쌀적정생산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와 경남도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우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휴경포함)에 ha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배정 시 109포대/40kg를 추가적으로 지원, 또한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정부·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 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 2022년 5월 말까지이며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경남도, 논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본격 추진(2022.3.24.) – 경상남도는 농업생산과정 중 논벼에서 생성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벼 시범 생산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 –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분야가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특히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2천만 톤 중 논벼에서 30% 정도인 6백만 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 저탄소 벼 시범 생산단지는 모잔들영농조합법인 회원 113농가, 100ha를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 조성하며, 단지 내 기술지원과 교육컨설팅은 경남도와 의령군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가 함께 지원

정책동향

시도	주요 정책 동향(농업 부문)
	– 기존의 벼 재배 방법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7월 초중순경 2주 이내 물떼기(중간낙수)를 하고 7월 중하순부터 벼가 익는 시기까지는 물을 깊이 대어(5~7cm) 재배, 이 방법은 메탄 생성균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온실가스인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 – 이번에 조성하는 시범단지는 중간물떼기를 2주 이상 실시하여 충분히 논을 말리고 이후 벼알이 익는 시기까지 2~3cm 얕게 물을 대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고, 토양이 건조해지면 산소가 풍부해져 메탄 생성균의 활동을 억제해 메탄가스 배출량을 감축 – 특히, 100ha 단지 내에는 시험포장을 6개소 운영하면서 저탄소 재배 물관리를 통한 벼 미질, 수량 등을 분석하여 메탄가스 발생량, 미질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하여 향후 국가 메탄지수개발과 농가 보급 확대 시 적용 – 또한, 물꼬, 균평기, 수위측정기, 논두렁 조성기, 저탄소 배출 비료 등 농가들이 저탄소 벼 생산을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농자재와 장비를 지원 – 아울러, 도내 전 논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 시·군별 교육홍보를 지원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한 벼는 기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 저탄소 농산물로도 인증을 받아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경남도는 2024년까지 3년간 3개소 정도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관심 있는 농업경영체와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신청 가능
제주	• 제주도, 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743억 원 융자 지원(2022.3.22.)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에 수요자 금리 0.5%를 적용하고, 총 7,938건 · 2,743억 원의 융자 지원을 확정 – 2022년 상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신청금액 987억 원과 기존에 실행된 은행 융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 도래 금액 1,756억 원을 합산한 규모이며,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 운전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도 재원 및 복권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 · 하반기 정기 융자를 지원 • 제주도, 『2022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과정 교육생 선착순 모집(2022.3.21.)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및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2022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과정』을 운영, 이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전문능력 등의 교육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관리 및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를 꾀하고자 마련 – 이번 과정은 2022년 4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초과정※ 100시간, 심화과정※※ 50시간 등 15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40명 ※ 기초과정: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 시설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시설 운영 등을 교육 ※※ 심화과정: ▲특수목적형 치유농업의 이해, ▲특수목적형 치유농업 대상자의 이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이해, ▲유관기관 실습 과정으로 진행 –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 29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접수, (신청 대상) 2022년 3월 2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주소 변동 없이)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모 소유의 치유농업시설(과원, 전 등)이 있으면 가능, (교육 대상자) 선착순으로 선정, 모집인원의 25% 내로 추가 접수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중도 포기 시 접수순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

자료: 각 도별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정리·작성

아젠다발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외

이슈 브리프 1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중간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 2022.3.17. 발표)" (2022.3.2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전 세계 백신접종 확대, 주요국에서의 거시정책 지원, 우호적인 금융 여건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글로벌 경기회복**이 **2022~23년 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직전 OECD 경제전망**※(2021.12월) **이후** 발표된 각국의 **GDP 실적** 및 **2022년 초반 고빈도**(high-frequency) **경제지표**도 대체로 **기존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2) 4.5%, (2023) 3.2%

- 한편,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 팬데믹 관련 공급 제약, 2020년 중반 이후 빠른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미국·남미·중동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확대**

〈경제적 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은 팬데믹 발생 이후 나타난 일부 공급망 훼손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부정적 공급충격**을 **야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경제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며 **무역 비중**도 이와 **유사**한 수준

- **對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및 **러시아**의 여타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1~1.5% 수준**에 그치는 등 **금융 연계성**도 **크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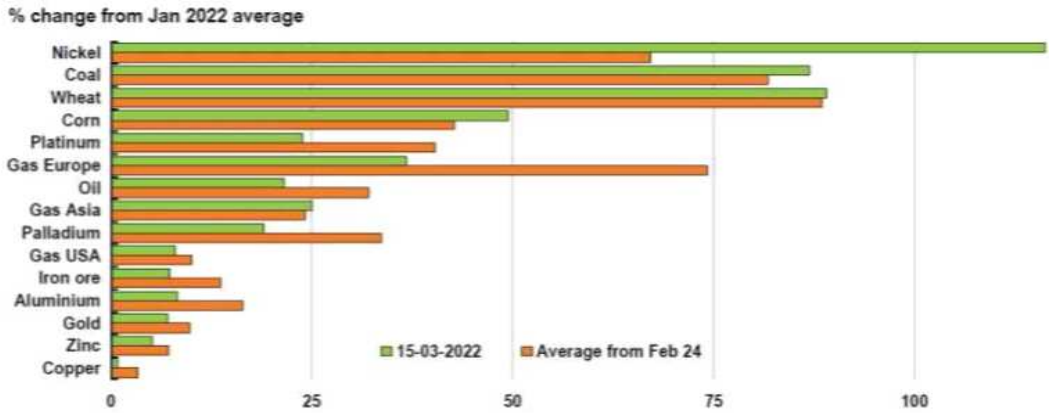
○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경제**에 **큰 영향**

아젠다 발굴

- 양국의 **밀(30%)**, **옥수수·광물질비료·천연가스(20%)**, **원유(11%) 수출**의 경우 전 세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광물**(팔라듐·니켈 등), **네온·아르곤 등 불활성 가스**(inert gases), **티타늄 스펀지, 우라늄** 등에 **크게 의존**

- **해당 원자재가격**은 아직 생산 또는 수출 물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후 큰 폭**으로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원자재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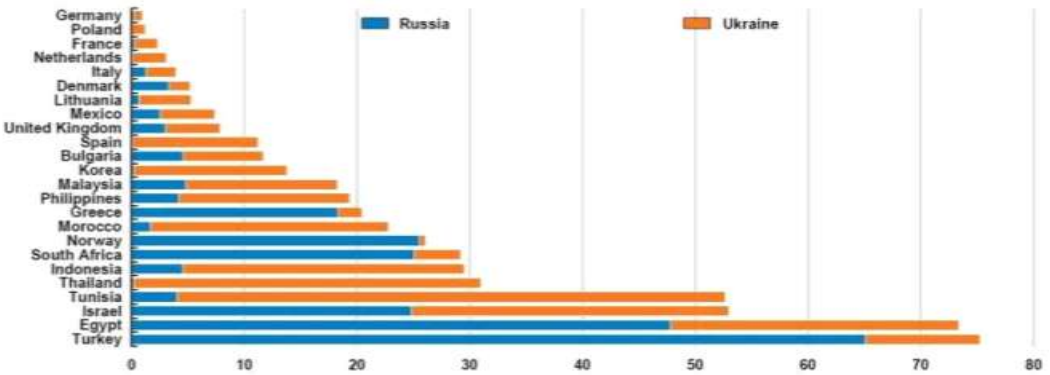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e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밀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경우 다수의 **신흥국·개발도상국**은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할 가능성 존재

-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빈곤·기아**로 인한 **인도주의적 재난**에 처할 위기※이며, **비료 제조**에 **차질**이 생길 경우 **2023년 농작물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어려움**이 더욱 **장기화**될 소지

※ 다수 중동국가의 경우 밀 수입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75% 수준

▌국가별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밀 수입의존도▐



자료: Comtrade, OECD 자체 계산

아젠다 발굴

○ 상대적으로 작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쟁 관련 **對러시아 경제제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

-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일부 개인·은행**을 대상으로 한 **외국자본**에 대한 **접근 제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접근 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단행**

- **위험회피 심리 고조,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여건**도 **악화**되는 한편, **여객·화물기 운항**이 **우회 또는 중지**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였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

○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적**으로도 **군비 증가 압력**,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지급시스템 분절화**(payment system fragmentation),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변화** 등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내재

-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구조**가 다수의 **블록**으로 **재편**될 경우 **전문화**(specialization), **규모**의 **경제**, **정보**와 **노하우 확산** 등에 따른 **이익**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국가**의 **SWIFT 퇴출**로 인해 이를 대체할 **다른 지급시스템 개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은 아직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전쟁**의 **지속기간**과 **각국**의 **정책 대응**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동 사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발발 이후 1년간 전 세계 성장률**을 **1%p 이상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약 2.5%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전제조건: 전쟁 직후 2주간 원자재·금융시장에 발생한 충격이 최소 1년간 지속, 러시아의 경기 부진(10% 이상 역성장) 및 인플레이션 확대(약 15%p)

-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접경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스 가격**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전쟁 이전 러시아와의 **기업활동** 및 **에너지 부문**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에 주로 **기인**

아젠다 발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 미국은 러시아와의 무역·투자 연계성이 높지 않은 데다 일부 국가의 경우 원자재 생산국인 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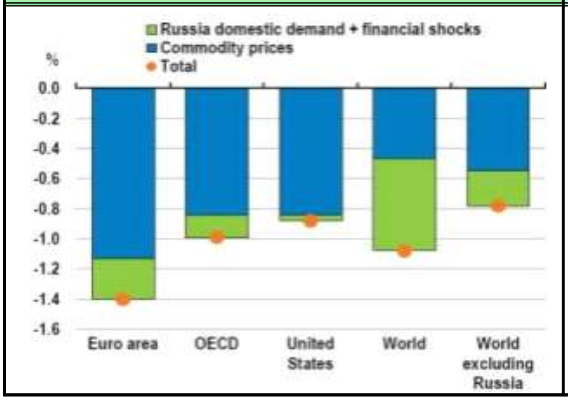
  ※ 그러나 글로벌 수요 부진, 높은 물가수준에 따른 가계의 소득·지출 감소 등으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 신흥국 성장률 결정 요인으로는 원자재 생산·수입 여부에 따른 국가별 상반된 여건, 투자 관련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이 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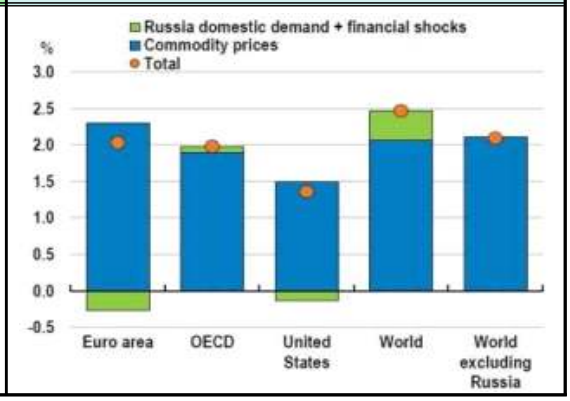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의 경우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확대 폭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한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각각 평균적으로 1%p 이상, 1.5% 상승

〈GDP에 미치는 영향[1]〉



〈인플레이션 영향[1]〉



주: 1) 전쟁 발발 이후 1년 기준
자료: OECD 자체 계산

○ 러시아의 對EU 에너지 수출 전면 중단 가능성은 향후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

- 단기간 내에 여타 국가로부터의 공급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스 비축량도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충격이 갑작스럽게 발생

-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영향을 시산해 볼 결과 EU의 에너지 수입이 20% 감소할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EU 전체로는 GDP가 1%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부문별) 국내 에너지 생산, 항공운송, 화공품·금속 제조업 등이 가장 큰 타격

〈사회적 영향〉

○ 전쟁에 따른 인도주의적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

아젠다 발굴

- **전쟁 발발 직후 3주간** 이미 **약 3백만 명**※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였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주택 보조, 식량 공급, 의료 보조, 보육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출**이 **요구**

  ※ 이는 시리아 난민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을 당시(2015~16) 유럽국가들로의 연간 난민 유입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

○ **난민들**의 **숫자 및 거주기간, 1인당 소요 지출 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출**에 따른 **부담**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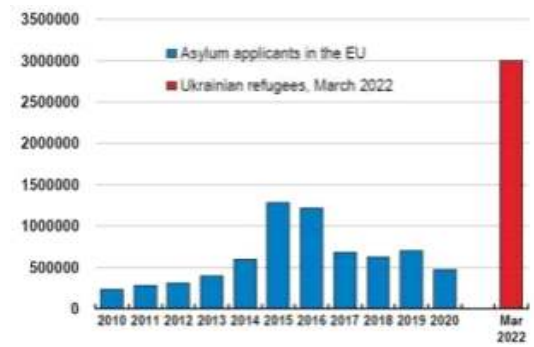
- **1년간 난민**의 **보호시설 수용**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별,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1인당 약 10.0~12.5천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의 난민 규모(30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더라고 **1년간 총 직접 지출 규모**가 **최소 EU GDP**의 **0.25% 수준**

- **EU 전체적**으로는 **초기 비용**을 **감당**할 만하나 우크라이나 인근 **개별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EU 국가 간 고통 분담**이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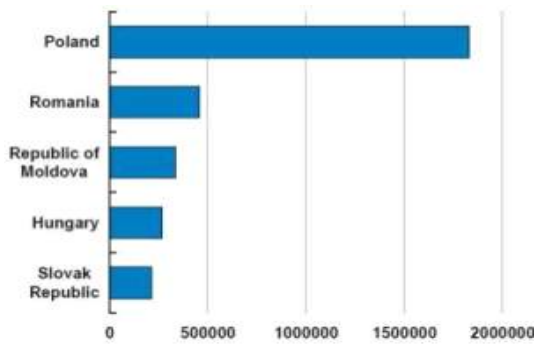
  ※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난민이 헝가리·몰도바·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로만 이동

〈난민 수 비교[1)]〉



주: 1) 보호시설(Asylum) 요청자 수는 국제적 보호를 요구한 지원자수

〈국가별 난민 수[1)]〉



주: 1) 2022.2.24일~3.15일 기준

〈정책적 시사점("The war complicates the task of policymakers")〉

○ 전쟁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증대된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차별화된 경기회복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던 **정책당국**에 **어려움**을 가중

1 통화정책

아젠다 발굴

○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필요 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위한 **개입** 등에 **중점**을 둘 필요

-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로 속도는 다르겠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특히, 미국과 같이 경기가 팬데믹 위기로부터 상당부분 회복되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국가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이 큼.

- **근원인플레이션**이 **낮고 임금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으며** 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큰 **국가**는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다소 늦추는 것**이 **적절**

- 한편, **일부 신흥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긴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식료품·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 이는 금융시장 리스크 및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재정정책

○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팬데믹 관련 지원**이 점진적으로 **줄면서** **2022~23년 중 재정정책**이 **점차 긴축 전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쟁**의 **영향**으로 다수의 국가가 이미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 대한 **수정**을 **고려 중**

-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시 유럽 내 난민 지원**, **원자재·식료품 가격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완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국방 관련 지출 증가**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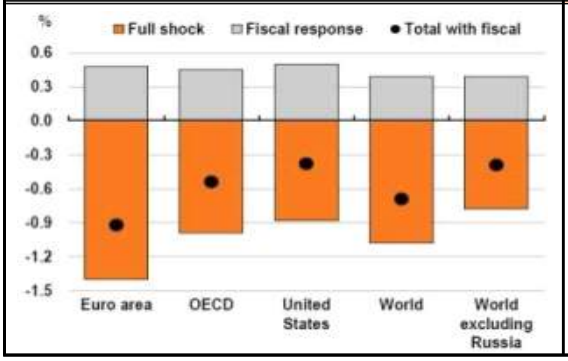
○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1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0.5% 규모**의 **정부 지출**이 **선별적**으로 **집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절반 가량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

- 이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부족한 **OECD 비회원국**에게도 **선진국**의 **수요 및 무역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로 **인플레이션**도 **확대**되겠으나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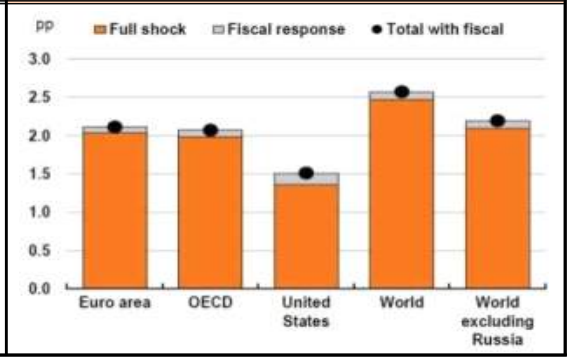
아젠다 발굴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

〈GDP에 미치는 영향[1]〉



〈인플레이션 영향[1]〉



주: 1) 전쟁 발발 이후 1년 기준
자료: OECD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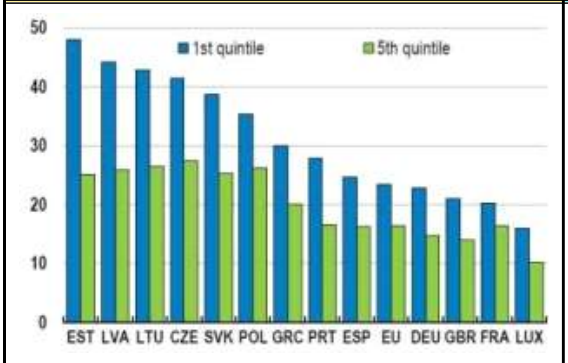
3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 완화

○ **에너지·식료품 관련 지출 비중**이 **저소득 국가·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 계층**에 **크게 나타날 우려**

- **각국 정부**는 **전쟁 이전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전쟁 이후** 이러한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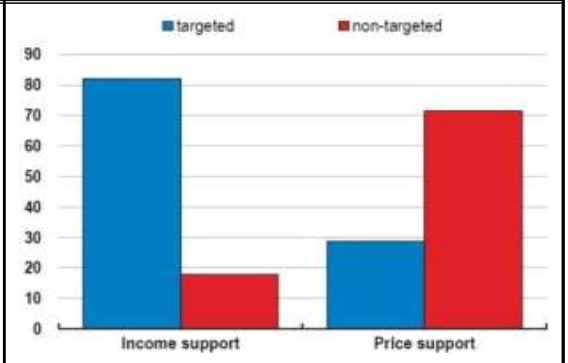
※ (소득지원)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이전, (가격정책)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료 및 전기 관련 소비세 인하, 에너지가격 동결 등

〈가계 소득분위별 식료품·에너지[1]〉



주: 1) 식품무알콜 음료전기가스기타 연료

〈지출 비중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1]〉



주: 1) OECD 회원국 중 28개국 기준

○ 전쟁 이후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경제적 **비용 최소화**, **가격**의 **시그널 기능**의 **왜곡 방지**를 위해 **선별적**이고 **일시적**으로 **시행**될 필요

아젠다 발굴

- **세율 인하**와 **가격상한제**는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연료 부족으로 도움이 절실한 가구뿐만 아니라 **고소득 가구**의 **편익**도 **증대**

- **현금이전**은 **선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중저소득 가구**에 **중점**을 둘 경우보다 **큰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4 공급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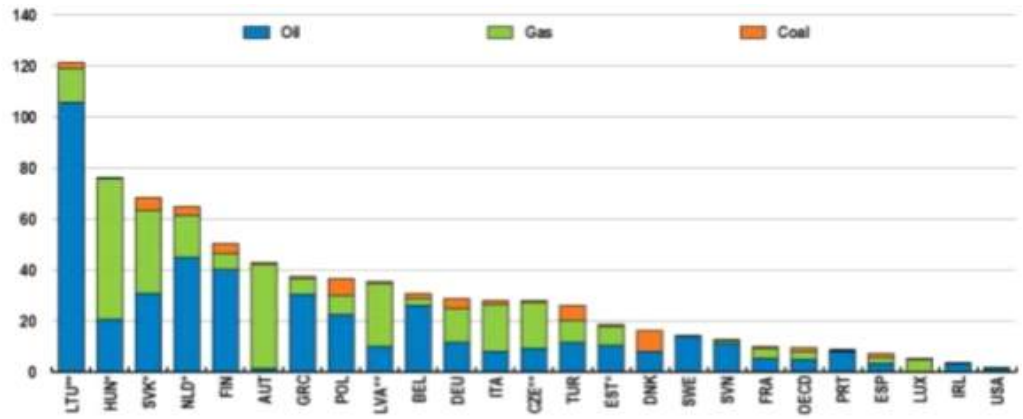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OECD 회원국**의 경우 **화석연료 수입**의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에너지**의 **가격변동 충격**에 대한 **취약성**, **공급부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최근까지 **유럽**은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의 **40% 이상**, **원유 수입**의 **약 25%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

  ※ 가스는 유럽 가구의 주요 난방 공급원일 뿐 아니라 발전, 비료 등 산업생산의 중요한 투입요소

-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개선**은 **중기적**인 **과제**이나 IEA가 이미 발표한 향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 감축 계획**이 **실행**될 경우 **2022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국가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의존도▐



자료: IEA database, OECD 자체 계산

- **장기적**으로 OECD 회원국은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화석 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앞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전략은 외부 충격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Net-Zero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아젠다 발굴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연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농식품 무역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EU-Russia trade in agri-food products" (2022.3.7.)와 "Russia's war on Ukraine: EU-Ukraine trade in agri-food products" (2022.3.1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유럽연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농식품 무역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럽연합**의 **주요**한 **교역 파트너**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농식품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의 **무역 피해**가 **예상**됨.

- **2020년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총교역량**은 **1,737억 유로**를 기록함. **우크라이나 수출 상품**의 **40%**(2019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고 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유럽연합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로 여겨짐.

-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5번째 수입국**이며, 유럽연합에서 기계, 교통, 화학제품, 제조업 제품, 농식품 등을 **790억 규모**로 **수입**,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연료, 광물, 농산물, 철강 등을 총 **950억 유로**의 규모로 **수출**함.

- **우크라이나**는 **원료**, **화학제품**, **기계 등**을 **유럽연합**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음.

- **2014년**에 **크림사태**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무역**이 **감소**※하였으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하여 **무역량**이 다시 한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크림사태 발발 당시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해 주요 농식품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

○ **러시아**로의 **농식품 수출액 비중**은 **유럽연합**의 **러시아**로의 **수출액 중 3.7%**(68억 유로)를 차지, **농식품 수입액**은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입액 중 1.4%**(18억 유로)를 차지함.

- 농식품 중 유럽연합에서 러시아로 **음료**(21.2%), **조제식료품**(edible preparations)(9.3%), **식품산업 부산물**(8.0%), **유지류**(7.4%) **순**으로 많이 **수출**(2020년 금액 기준)되는 반면, **사료 원료**(feed components)(32.3%), **유지류**(19.1%), **동물성·식물성 지방**(9.9%), **음료**(7.0%), **곡물**(6.5%) 등이 주로 **유럽연합**으로 **수입**됨.

아젠다 발굴

- 러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으로는 대두(52.0%), 코코아(22.2%), 대두를 제외한 유지류(22.2%) 순으로 나타남.

- 러시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품으로는 사료 원료(18.9%), 설탕(7.8%), 대두를 제외한 유지류(6.7%) 순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와의 농식품 수출입은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액에서 35.7%(58억 유로)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액의 12.4%(29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농산물 수입의 많은 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곡물(밀, 쌀 제외)로 48.9%를 차지, 뒤이어 식물성 기름(올리브유 및 팜유 제외)의 의존도가 48.5%로 높게 나타남.

-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으로는 대두를 제외한 유지류(12.2%), 코코아(7.2%), 담뱃잎(5.9%) 순으로 나타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럽연합의 농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해바라기씨유(세계 수출량의 28.6%), 밀(18%), 보리(15.4%), 옥수수(2.3%)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임.

- 우크라이나 또한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밀, 호밀의 수출량이 많은 국가임.

- 전쟁으로 인하여 곡물, 비료, 유지류 등의 가격의 종합적인 변화※가 예측됨.
  ※ FAO 식품 가격 지수는 2022년 2월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140.7)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1년도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 결과(2)

※ 일본 농림수산성 "「食生活・ライフスタイル調査～和3年度～」の結果公表について"(2022.3.1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 결과(2)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2021년**부터 **먹거리**와 **농업 연결 강화**에 주목한 새로운 **국민운동** '**먹거리**를 통해 **일본**을 **생각**한다. **일본 푸드 시프트**(NIPPON FOOD SHIFT)'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푸드 시프트 운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일상 소비 행동**이나, **먹거리** 및 **농업**에 대한 **의식**, **식사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조사(2021년)'**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3월 10일 결과**를 발표함.

〈먹거리와 농업 연결〉

○ **[일본 농업 과제 인지]** 현재 일본 농업의 과제 중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식품 손실 삭감'**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농업 종사자 감소·고령화' 45.1%**, **'식량 자급률 저하' 41.6%** 순으로 조사됨.

○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인지]**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9.9%**이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름'**은 **17.1%**로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지는 **30% 미만**인 반면, '내용은 알았으나 단어는 몰랐음' 13%, **'들어본 적 없음'**은 **60%**였음.

○ **[먹거리 및 농업에 관한 정보 입수 경로]** **'텔레비전'**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인터넷(뉴스 사이트 등'이 42.1%였음.

○ **[농림수산업 접점]** **'근처에 논밭이 있음(있었음)'**이 **32.9%**, **'채소 수확 및 과일 따기 체험'**이 **30.1%**로 높았음. 한편 **'농림수산업과 접점 거의 없음'**이 **39.1%**로 조사됨.

〈식량자급률 인지와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

아젠다 발굴

○ [식량 자급률※/식량 자급력※※/식량 국산율※※※ 인지]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력, 식량 국산율 각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5%** 수준이였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음'**에 대한 응답은 **'식량 자급률' 36.6%**, **'식량 자급력' 28.6%**, **'식량 국산율' 20.4%** 순으로 높았음.

※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량이 얼마나 국내 생산으로 조달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식량 안전보장 관점에서 열량(칼로리)으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칼로리 베이스와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생산액 베이스가 있음.

※※ 일본 농림수산업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으로 일본 농지 등의 농업자원, 농업인, 농업기술을 모두 활용한 경우 어느 정도의 식량(칼로리)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 국산 사료와 수입 사료 사용 구분 없이 축산업 활동을 반영하여 국내 생산 상황 평가하는 지표

○ [식량 자급률 향상 중요성 인식] 현재 **식량 환경**을 설명※ 후 식량 자급률 향상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중요' 26.1%**, **'중요' 42.3%**로 두 응답의 합은 약 **70%**였음.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2.7%였으나,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5% 미만**이었음.

※ 세계 인구 증가 및 경제발전에 의한 세계 전체의 식량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 확대를 기반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인 먹거리 대응을 위해 국가에 기대하는 것] **'농업인 확보를 위한 지원'**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효율적·저비용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지원' 31.9%, '식생활 교육 추진 및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28%,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 비축' 27.6%, '소비자 니즈에 맞춘 국내 생산 확대' 2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장기적인 먹거리 대응을 위해 생산자·식품 관련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것] **'식량 공급력을 확보하여 안정적 식량 공급' 43.2%**, '품질 및 선도가 좋고, 맛있는 먹거리 공급' 41.2%,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더욱 다양한 국산 식자재 공급' 38.5% 순으로 조사됨.

○ [장기적인 먹거리 대응을 위한 소비자 대응] **'식품 손실 감소' 56.1%**,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 43.7%**가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 및 외식 시, 국산 선택' 33.6%, '밥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 활성화'가 30.2%였음.

아젠다 발굴

〈일본 푸드 시프트에 대한 인지 및 농업·농촌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정보〉

○ [일본 푸드 시프트 인지] **'알고 있음'**은 **5.9%**,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음' 16.2%인 반면, **'몰랐음'**에 대한 응답은 **77.9%**였음.

○ [농업·농촌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정보] **'지역의 특색이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에 대한 정보' 32.6%**, '일본 각지의 농업·농촌 매력에 대한 정보' 30.2%, '건강한 식생활(식품 및 메뉴 선택법, 영양 균형 등)에 관한 정보' 28.3%, '일본 먹거리 및 농업 과제(농업 종사자 감소, 농지 면적 감소 등)에 대한 쉬운 설명' 27.8%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anpo/attach/pdf/220310-1.pdf

언론 동향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와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와 주요 동향

○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면서 양봉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농촌진흥청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양봉협회와 합동으로 2022년 1월 7일~2월 24일 동안 **전국 99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벌들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

- 2022년 3월 19일,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4,173개 농가**※, **39만 517개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졌으며**, 이는 벌통 1개당 1만 5,000~2만 마리가 사는 것으로 보면 **60억~70억 마리 이상**으로 **피해 금액**만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 전국의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기준 2만 7,532가구

  ※ (지역별) 전남 지역의 벌통 10만 5,894개를 비롯해 전북(9만 개), 경북(7만 4,582개)에서 큰 피해를 봤으며, 경남(4만 5,965개)과 충남(3만 1,280개), 강원(1만 3,033개), 경기(4,250개)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아젠다 발굴

- 한편, **충남양봉협회**가 2022년 2월 21~23일 **도내 6개 시·군 36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농가가 키우던 꿀벌의 수가 **평균 59%**나 **감소**

○ 농촌진흥청은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 등 **해충**의 **증가**,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 농촌진흥청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 집단**에서 **응애**가 **관찰**됐다" 고 밝히면서 국내의 꿀벌 집단 실종 역시 꿀벌응애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 **꿀벌**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기생성 해충 '꿀벌응애'**

- **꿀벌응애**는 꿀벌을 숙주로 삼는 기생성 해충으로, 양봉농가는 살충제를 써서 해충을 예방해야 하는데 2021년 양봉농가가 꿀벌응애 발생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사양 꿀과 로열젤리를 생산하느라 적절한 시기에 예방을 못 했을 가능성이 제기

- 이 외에 **이상 기후**도 꿀벌 실종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9~10월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꿀벌**의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11~12월**에 이어진 **고온**으로 **밀원수**(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의 **꽃**이 **이른 시기**에 **피면서 꿀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고 설명

  ※ 2021년 9~10월에는 저온현상이 발생해 꿀벌의 발육이 원활하지 못했고, 11~12월에는 고온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봉군이 약화, 이렇게 약화된 봉군으로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의 외부 활동으로 체력이 소진됐고,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꿀벌이 꿀을 따기 위한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꿀벌**의 **시야**를 **가리면서 빗어진 일**로 분석

○ 일부에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와, 정현조 양봉협회 경상남도 지회장은 "(자신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조사 결과서에는 꿀벌에서 총 9종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적혀 있다" 면서 "하지만 현재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꿀벌 실종 이유로 '바이러스' 가 빠져 있다" 고 강조

아젠다 발굴

○ 과거에도 꿀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져 벌통이 비는, **'군집 붕괴현상'** 이 있었으며,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지난 **2010년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전염병**으로 **토종벌 65% 이상 실종**

○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꿀벌의 감소 원인은 크게 △**서식지 감소**, △**병해충**, △**기후변화**, △**농약사용**,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등 6가지를 제시

※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적 자문을 위해 2012년 설립된 기구로 기후변화협약 부속 과학자문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비슷한 기능을 함.

- **도시 개발**로 인해 **꿀벌**이 **서식**하고 **꽃가루**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농경지**나 **산지**가 **줄면서 집약적 환경**에서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 쓰는 **농약**이 **해충**뿐만 아니라 **일반 곤충**에게까지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로 **꿀벌**의 **면역력**이 **떨어져**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곤충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는 것도 문제라는 설명

- 앨리슨 그레이※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 수학·통계학과 교수는 "꿀벌 폐사는 **특정 날씨 패턴**이나 **양봉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여름철에 **양봉 관리**가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 **겨울철 폐사율**이 **달라지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천적**인 **각종 기생 진드기**의 **번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꿀벌 폐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고 언급

※ 스위스 베른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20개국 3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꿀벌연구협회'(COLOSS)에서 활동

- 벌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굴슨 영국 서식스대 교수는 2022년 3월 초 과학저널 '사이언스' 에 발표한 분석 논문에서 "**살충제 오염, 전자파 노출, 도시화, 온난화** 등 **꿀벌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기인**한 것" 이라고 지적

○ 문제는 **꿀벌**이 **사라질 경우** 인간의 **일상생활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주요 농작물**이 **꿀벌**의 **수분 활동**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은 **결국 식량 부족**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

-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 , 이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의 **경고**로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이 없으면 식량도 사라진다는 의미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00대 농산물 중 약 71%**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데 꿀벌이 없다면 당장 100대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재의 **29%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아젠다 발굴

- IPBES에서 작성한 '수분매개체, 수분 및 작물생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분 매개 곤충**에 의해 **재배**되는 **작물 생산량**은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전 세계 농산물 생산액 중 5~8%**에 이른다며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350억 달러**(약 285조 원)에서 **최대 5,770억 달러**(약 700조 원) 수준

- **2015년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과일·채소** 등 **생산량**이 **줄고,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한 해 142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하기도

  ※ 과일 생산량은 22.9%, 채소는 16.3%, 견과류는 22.3% 줄면서 특히 임산부와 아동,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비타민A, 비타민B, 엽산 등 영양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 것이라는 분석

- 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연구관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생존**할 수 **없다**"며 "돈 있는 사람이 식량을 선점하고 없는 사람은 **식량 확보**를 못 하게 된다"고 경고, **꿀벌 멸종**이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은 **양봉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

- **(농식품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꿀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꿀벌 구제 약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

  ※ 경영 위기 준전업농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있는 경영체, 개인 20억 원 이내(고정 1%)

  ※※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 입은 농축산업인, 농가당 1,000만 원 이내(연 2.5%)

  ※※※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등: 총사업비 74억 원

- **(농촌진흥청)** 정확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극 보급할 계획, 그 일환으로 꿀벌응애 친환경 방제 기술과 무인기(드론) 이용 **등검은말벌 조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월동 꿀벌 관리기술 자료 발간**과 **배포**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

- **(농림축산검역본부) 응애 구제제 적정 사용요령 교육**을 **확대**하고, **질병 조기 진단**과 **기생성 응애류**의 **최적 약제 선발**을 **강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로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난 **천연물 유래 응애 구제제**를 **개발**할 계획

❍ 한편, **충남**은 지난 **2018년부터 아카시아, 백합나무** 등 꿀벌 먹이가 되는 **밀원수 610만여 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해 꿀벌 실종을 줄이기 위해 노력

아젠다 발굴

○ 강원도는 2022년 3월 20일, 강릉지역에 있던 1만 3,917개 벌통 중 43%인 6,000여 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통상적인 피해 규모인 10~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 경기 파주시는 2022년 3월 23일, 최근 이상기온과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기자재·구제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혀

-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양봉농가 도난방지용 CCTV 지원사업,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기자재, 사료 용해기, 말벌 퇴치 장비 등 양봉농가 집중 지원에 나설 방침

- 또한, 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의 주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산 6천 400여만 원을 들여 구제약품을 보급할 계획

○ 함안군은 2022년 2월 벌집군집붕괴 현상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 전체 양봉농가 158곳, 1만 4,794군 중 17곳 농가 1,723군의 피해 발생해 2022년 3월 22일, 피해 대책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져 벌집군집붕괴 현상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대책으로 면역증강제를 구입해 2022년 4월 중 지급하기로

○ 경기도 여주시는 양봉농가 170여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5%인 128곳에서 월동 꿀벌 실종 피해가 발생하여 꿀벌응애류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농가에 구제 약품 630통을 확보해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가축방역 예산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양봉협회 등에서 요청한 약품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

자료: "59억마리…꿀벌은 왜 사라졌을까"(경향신문, 2022.3.20.), "최근 '70억마리 꿀벌' 증발…이는 "4년내 인류 멸종" 경고다? [뉴스원샷]"(중앙일보, 2022.3.20.), ""70억 꿀벌들아 어디갔니" 벌 집단 실종에 전국 양봉농가 '속앓이'"(한국일보, 2022.3.20.), "[친절한 뉴스] 사라진 꿀벌들, 왜?"(KBS, 2022.3.22.), "파주시 양봉농가에 기자재·구제약품 지원"(연합뉴스, 2022.3.23.), "경기도 여주에서도 양봉농가 75% '꿀벌 폐사·실종' 피해"(한겨레, 2022.3.24.), "함안군, 양봉농가 피해 대책 마련"(농수축산신문, 2022.3.25.), "꿀벌이 사라진다…밥상 위 먹거리와 함께"(서울신문, 2022.3.25.), "전국 양봉농가 월동 꿀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2.3.14.)

통계·조사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 : 통계청(2022.3.24.)

〈인구〉

○ [2021년 총인구] 5,175만 명이며,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

○ [2021년 고령인구]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42만 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

○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감소했으며, 2017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

○ [2021년 수도권 인구] 2,605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2010) 49.3% → (2021) 50.3% → (2030) 51.0%

〈가구 · 가족〉

○ [2020년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2020년 우리나라 1인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각각 31.7%, 28.0%로, 전년보다 1.5%p, 0.2%p 증가, 2000년 대비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줄어

○ [2020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34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2000년보다 0.78명 감소

○ [2020년 가족 형태별 가구 구성] 2020년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43.9%) > 부부(25.4%) > 한부모와 미혼자녀(14.7%) 순

〈건강〉

○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5년으로 10년 전(80.2년)보다 3.3년, 전년(83.3년)보다는 0.2년 증가

○ [2020년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 66.3년으로 2년 전(64.4년)보다 1.9년 증가했으며, 기대수명보다 17.2년 짧아

○ [2020년 사인별 사망률]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사망했고, 다음은 심장질환(63.0명), 폐렴(43.3명) 순

통계·조사

○ [2000년 흡연·음주] 2020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9.2%, 음주율은 55.2%로 각각 전년 대비 1.0%p, 2.5%p 감소

〈교육 · 훈련〉

○ 2021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 대비 8.4%p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

○ [2021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14.0명) > 중학교(11.9명) > 유치원(10.9명) > 고등학교(9.9명) 순

○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중학교(25.4명) > 고등학교(23.0명) > 초등학교(21.5명) > 유치원(16.1명) 순

○ 2020년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9.3%로 2년 전보다 1.3%p 증가

〈노동 · 여가〉

○ 2021년 고용률은 60.5%로 전년 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7%로 0.3%p 하락

○ 2021년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전년 대비 0.3%p 하락, 실업률은 7.1%로 1.2%p 상승

○ 2021년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시간, 0.2시간 증가

- 여가시간을 주로 혼자서 보내는 사람의 비중은 63.6%로 전년보다 3.6%p 증가

〈소득 · 소비 · 자산〉

○ 2021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57조 원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5,168달러로 전년보다 10.3% 증가

○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

○ 2020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6,125만 원으로 전년보다 201만 원 증가했고, 2021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9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증가

○ 2021년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 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

통계·조사

〈주거〉

-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418.2호로 전년보다 6.6호 증가, 주택 보급률은 103.6%로 전년보다 1.2%p 감소
- 2020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5.5배로 전년보다 0.1배p 증가,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6.6%로 전년보다 0.5%p 증가
- 2020년 우리나라 통근인구의 평균 통근시간은 30.8분으로 2015년 대비 0.4분 감소했으나, 2010년 대비는 1.2분 증가

〈생활환경〉

- 2020년 우리나라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33㎍/㎥,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로 전년보다 각각 8㎍/㎥, 5㎍/㎥ 감소
- 2020년 낮 시간대 소음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이며, 밤 시간대는 대전을 제외한 5개 도시(광주, 인천, 대구, 부산, 서울) 모두 기준치를 초과
-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11.0㎡

〈범죄 · 안전〉

- 2020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전년보다 0.6명 감소했으며,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2020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3,308건으로 전년보다 3.1%(107건) 감소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14.5%(561건) 감소
-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은 경찰(55.3%) > 법원(51.3%) > 검찰(50.1%) 순

〈사회통합 · 주관적 웰빙〉

-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2명(22.2%)은 외로움을 느꼈고,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적 지위(13.0%)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다음은 연령(12.9%), 성별(11.8%)에 따른 차별 순으로 경험
- 2021년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3.2%로 전년보다 13.6%p 증가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인포그래픽 ▐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